

KNSI REPORT

컨퍼런스

<제 12-1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및 대북정책

일시 : 2008년 2월 28일 (목) 10:30-12:00 / 장소 : 코리아연구원 사무실

- 사회: 김연철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주최 : 코리아연구원

※코리아포럼은 연구자-정책결정자-관련 전문가들이 실사구시적인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지적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장입니다.

김연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및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가 당분간은 순조롭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환경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 대해 미국이 취했던 태도와 지금 미국 조야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는 상당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04년 11월 12일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LA발언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북한의 말을 믿기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주장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로스앤젤로스 발언 직후 미 국무부가 “연설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한국정부의 고위관리들과 토론하고 싶다.” 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이지만 심각한 우려를 국무부가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표명했다는 것은 그 당시 부시 정부가 이 로스앤젤로스 발언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민하고 얼마만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대비되게 2008년 2월에 들어와서는 미국 상·하원이 대통령 당선인 축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당선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키겠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하고 또 한미양국은 국제평화와 안정, 경제적 번영, 인권, 법치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상당히 대조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커다란 외적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한미관계의 순조로운 미래를 예상케 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대미 추수외교에 함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과 관련한 이른바 어려운 결정이 쉽게 결정돼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실속 없고 갈등 유발적인 자주외교로 각인된 전 정부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학습효과와 새 정부 외교안보팀의 미국 친화적 성향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미국의 극적인 환대와 기대 등이 결합하여 외교안보의 중심추가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선회함으로써 시력을 잃고 내부적 갈등을 유발하며 외교안보적 퇴행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큰 틀에서 지적하자면,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의 철학이나 원칙이 실용주의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실용주의라는 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라든지 내용은 문제되지 않는데, 말하자면, 결과 중심적인 게 지나치면 원칙과 철학 도덕이 완전히 결여되게 됩니다.

제가 은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럭비식 실용주의는 공을 주고서 목표지점을 향해서 막 우회하지만 전진하는 것이 럭비식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나 도덕 철학을 결여한 상태에서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피구식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구는 공이 오면 피하기만 하면 되지요. 이런 차원으로 전략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실용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실용적 균형외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실용주의고 균형이고 말은 좋은데,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관련해서 현안이 생겼을 때, 어떤 근본적인 국가 목표를 향해서 전략적으로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기에 한미관계에서 실익은 없고 미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며 어떤 실익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깐 국내 정치적으로는 자주를 내세우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피구식 실용주의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용주의를 내세운다고 해서 반드시 실익 중심의 외교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우회를 하더라도 가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즉, 여러 개의 작은 실용주의적인 성과가 축적이 돼서 커다란 가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전략적 실용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유의하지 않으면 피구식 실용주의에 귀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성

저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인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용주의에 대한 박건영 선생님의 말씀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남북관계, 한미관계,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어떤 잣대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과거정부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만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거 정부 정책의 결과가 반영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잘못되었으므로 무조건 뭔가 다른 걸 해야겠다’ 는 생각 때문에, 마치 부시 행정부 1기 때의 ‘ABC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의 정책은 제외하고 뭐든지)’ 라고 하는 생각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첫 번째 우려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지향과 전략방침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 등에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인류 평화발전에 대한 기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가치의 지향’ 등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가치들을 강조하는 좋은 이야기들 바로 다음에는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략의 핵심은 한미동맹의 강화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깐 자신들이 목적으로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와 자신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태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긴장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략적 한미동맹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한미동맹관계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의 세계질서를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부시 행정부 하의 미국의 국제안보전략이나 외교전략이 세계평화에 기여한 면보다는 위협한 측면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지향한다면, 어떻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외교안보정책이 추구할 가치와 전통적 안보전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앞으로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건영

박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실용이라는 용어를 채택 한 것은, 무슨 동맹이나 외교안보 국가전략 차원이나 무슨 비전이 있어서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까 'ABC'처럼 노무현 정부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노정부가 이념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386’ 이라고 하는 고도의 상징 386=이념 또는 좌파 이런 식의 상징조작의 역조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인기 없는 이거 말고 요거다 이렇게 해서 실용이라는 것을 이념의 대척점에 놓고 실용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해서 실용이라는 것이 실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교안보적인 비전과 실용 또는 탈이념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용어인 차원이 크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또는 386에 대한 대척점으로 쓰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안보동맹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공유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중심은 새로운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유된 가치의 이면에는 공유되지 않은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제정치에서 통상적으로 실용주의라는 것은 제도나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도 평화공존 교류, 협력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공유된 가치를 그렇게 강조한다면 공유되지 않은 가치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이거 상당히 가치주의적이고, 또 “비핵개방3000은 북한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발언도 실용주의가 아닌 가치 중심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용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국내 정치적인 다시 말하면 전 정부의 실정, 실패로부터 반사이익을 얻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용어일 뿐인지, 실제 외교안보정책에서 실용주의가 사용될 가능성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발언들에 비춰 봤을 때 실용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가치지향적인 그런 방향의 외교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순성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결국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과거 정부에 대한 부정과 한미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처럼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대외의존적인 정책기조를 벗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기조 또는 정권의 정체성을 빨리 형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철

정리해 보면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가치외교 도덕외교를 지향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희옥 교수님께서 이명박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 하고 있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 복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한중관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옥

노무현 정부가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를 물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미,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중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라는 멘트에서 보듯이 주변 국가, 특히 중국과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를 초래 할 수도 있습니다. 한중관계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협력동반자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는데 그럼 이명박 시기에는 어떤 관계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맹을 복원하고 가치외교를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면 중국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한중간에 전략적 관계를 맺는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국이 얘기하는 전략적 관계는 한국의 동맹전략이나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구상이 명확히 나왔을 때,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도 미국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 이라는 개념을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전략적이라는 말 자체가 ‘전략적’ 이 되는 셈입니다. 중국이 일본과 작년에 맺었던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가 맺고 있는 관계와는 다른 맥락의 전략적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중국의 한반도 인식은 한미동맹의 균열들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매력공세(charming offensive)를 한국에서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한중간에 많은 마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어떤 중국관 매력외교가 작동하고 그것이 한국에서의 동맹의 조정이라는 이해가 일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매력외교를 추구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당분간 소강상태로 가거나 유보적 상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재정상화과정에 접어들었고 한미동맹의 문제는 남북관계나 한중관계의 복합성을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실용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외교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오히려 실용을 놓치지 않고 있나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동 이익(common interest)을 추구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위협을 공동으로 회피하는(common aversions)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다. 올림픽까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 인권문제, PSI, MD 문제 등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중관계는 변화의 시그널(signal)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국으로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관망하고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한미동맹의 기초, 엄격한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풀 수는 어렵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일각에선 햇볕정책이 없는 햇볕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북한문제에 대한 중요한 행위자들이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가치외교에 기초한 이런 외교정책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실에 기초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연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의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부의 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 부재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건영 선생님께서 이 정부의 북핵문제 접근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현재의 비핵개방3000에 따르면 조건부로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선택폐기론인데, 이미 부시정부 들어서자마자 선택폐기론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폐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이회숙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북중관계 재정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지는 이 상황에서 부시정부가 북한과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제 핵폐기와 관계정상화를 교환하는 큰 흐름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만 중국과 미국의 입장과 달리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그야말로 실용이 아니라 실익을 잃고 한반도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또는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시대착오적인 그야말로 결국은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과거 YS정부가 클린턴정부에 대해서 했던 북미관계에 대해 동적인 다이내믹스를 이해하지 못해 수많은 경제적 부담만 우리가 짊어졌던 점에서 보듯 결국 외교무대에서는 우리만 소외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폐기론이 정부 취임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고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것이 중대한 외교안보적 퇴행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폐기론은 지금 현 단계에서 국제정치적인 다이내믹스에서 벗어나 있는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순성

두 가지 정도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비핵·개방·3000>에서 비핵 또는 핵폐기가 조건인지 목표인지 불분명하며, 다음으로 북핵문제의 성격 또는 본질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구상 자체의 내용이나 정책 추진 전략에서 확실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지요.

북핵문제에서 핵 폐기만을 강조하면, 북한 핵 문제를 군사안보나 국방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북핵문제는 단순히 국방이나 군사안보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 북한체제 속성의 변화, 북미관계 변화, 동북아 질서의 변화 등 매우 복잡하고 거시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중장기적인 국가대전략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이슈로 바라본다면, 폭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난 시기 북한체제가 정치·경제적으로 약화되고 군사적으로도 남한에 열세했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었고 한국의 발언권이 올라갔습니

다. 아울러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은 북한의 국제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과 해결 과정은 이런 점에서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가 좋아지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또한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북한 핵문제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핵심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군사안보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동북아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또한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국가 이익이 분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혹은 전략적 동맹관계로 바꿔보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현 정부가 국가전략의 외교적 지형의 변형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북한 핵문제도 여전히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앞으로 5~10년 동안에 북핵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 질서의 변화가 한국의 외교안보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고민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선택폐기론에 집착한다든지, 그리고 마치 남북관계는 경제만 잘 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박건영

각주를 하나 단다면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북한주민의 국민소득을 3,000불까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인민에게 국민소득 3,000불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 폐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핵 폐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데, 핵 폐기를 하면 3,000불 소득을 만든다. 대북정책이 북한주민들 3,000불 만들어 주는 게 논리적으로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의 대북정책과도 맞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나 하는 방법론이 뒤따라가야 하는데 목표가 방법론화 되어있는 그런 논리의 역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철

제가 생각 할 때는 두 가지 문제점 같은데 첫 번째는 선택폐기론이라는 게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건데,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폐기 시킬 것인가 하는 토론정책의 부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북핵문제는 결국에는 아까 박건영, 박순성 교수님이 지적했었지만 행동 대 행동 일종의 포괄적 접근 방식인데, 이 방식에 대한 생각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관계개선 문제라던가 한반도평화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책적 사고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나 봅니다.

박건영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현실에서 왜 필수불가결하냐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놓여있는 두 가지 즉 하나는 생존의 문제이고 하나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핵은 북한으로서는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내가 먼저 폐기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 커다란 역사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하기가 어려운 따라서 동시에 갈 수밖에 없고 행동과 행동이 동시에 교환될 수밖에 없는 불가결한 차원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관계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이 생존과 불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행동 대 행동, 동시행동원칙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순성

여기에서 제가 각주를 하나 단다면, 결국은 행동 대 행동이 실질적으로 가장 완벽한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불신이 존재하

고 생존이 걸려있을 때에는 실용주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초반이나 부시 행정부 1기 때에 했던 전략적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핵문제를 먼저 풀고 난 뒤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태도, 또는 북한체제를 단번에 바꾸거나 핵을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못 얻고 상황만 악화시켰습니다. 그런 정책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한편으론 병행전략으로, 다른 한편으론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왔지요. 현재의 협상과 타협이 지난 5~8년 동안 실제 경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 추구하는 것이 과연 실용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박건영

선택폐기론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핵실험입니다. 선택폐기론 때문에 북한은 핵실험한 것입니다.

김연철

최근에 보니까 미국이 다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옥

6자회담에서 북미관계가 현실적으로 양자대화로 진행이 되니까, 중국의 영향이 줄아진 측면이 있어서 중국내부에서는 6자 회담 무용론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생각하기에는 비핵화라는 게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경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그냥 정말 실용이 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관망하면서 이명박식의 그럭저럭 버티는(muddling through)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핵폐기와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입구론과 출구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일단 출구론 쪽에 서 있지만, 출구론에서 점점 걸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핵 현실이고 걸어 내려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주변국가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간단치 않다고 보고 이런 국면에선 미국도 어려운 입지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다시 주문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스스로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서 남북관계의 촉매역할을 하게 하는 것들은 중국으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박순성

그래서 <비핵·개방·3000>에 대해 다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 정부도 <비핵·개방·3000>을 순서대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 정도에 따라 남북경협도 추진할 수 있다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한다면, <비핵·개방·3000>을 알파벳 <A·B·C>로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 패키지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핵, 개방, 3000 각각을 함께 추진하는 병행구조로 생각하면서, 비핵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의 문제로, 개방은 경제의 문제이자 체제의 변화의 문제로, 3000은 남북 경협의 문제이자 국제적 지원의 문제로 보면서, 동시에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비핵·개방·3000>은 참 좋은 구상이지요.

김연철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로 넘어와서 얘기해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평화를 지키는 peace keeping단계에서 평화 만들기 단계로 최근 몇 년 동안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peace making단계로 가다가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이 정부의 방침이 일종의 부시정부의 초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쪽에서 뭘 한다기 보다는 북한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런 기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과연 peace keeping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당장 우려가 되는데, 벌써 PSI의 몇 가지 조항들에 참여하고 있지만 PSI 부분들을 좀 더 확장된 루트로 이제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MD부분도 그 동안 조금씩 진행된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결정들이 나타났을 때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이것은 한미동맹의 강화에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라고 전 봅니다. MD 라든지 PSI는 실질적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는데 근거는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PSI를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핵 물질이 이전 되는걸 차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과만한 플루토늄이 망망대해에서 PSI를 통해서 여태까지 한번이라도 핵물질이 이전 되는거 찾아 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PSI가 미국에 안보정책을 정치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큰 것이지, 그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해결한다는 걸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4년에 사임했던 갈루치가 바로 그 일을 했는데, PSI를 추진할 당시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빠졌을 때 PSI를 통해서 그 정치적인 지지를 얻고자 했던 동기가 강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필요성이 상당부분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뒤늦게 PSI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실용주의도 아닐뿐더러 정치적으로도 타이밍이 상당히 맞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PSI의 정치적인 철학은 신 보수주의란 말인데, 지금 공화당의 맥케인이나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이 세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반 신보수주의자입니다. 가정해서 얘기하면 차기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동아시아 정책이 PSI하고 상당히 실용적으로 친화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 정부가 PSI 참여를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또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도 친화적이지 못한 것 입니다.

박순성

한마디만 덧붙이면, 역시 MD가 핵심 문제일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MD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김대중 정부인데, 제가 이해하기론 김대중 정부는 MD에 대해 NCND정책을 편 것 같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불만이 있었고 국내의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했지만, 적절한 태도였던 것이지요.

박건영

김대중정부는 NCND가 아니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 할 꺼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순성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것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장기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상태에서 MD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PSI도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PSI는 정말 어렵다라는 일종의 균형외교 또는 외교적 전략차원에서 진정으로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연히 MD와 PSI를 강조하다 보니깐, 기본적으로 실용주의나 실리주의와 모순되는 현상이 자꾸만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정책 기조와 그 밑에 있는 정책 수단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이 문제인데, 이러한 모순들이 계속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점검해야지, 그렇지 않고 2~3년 뒤 실패한 이후에 재점검 한다면, 그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희옥

저는 MD, PSI, 인권이란 것들이 분리해서 접근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MD문제를 대중국봉쇄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양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MD를 하게 되면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한중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PSI문제는 실질적인 안보위협이라는 측면 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MD문제 보다는 위험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명박 정부가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있지만, 인권문제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문제에 대해 UN 결의안을 제기 했을 때, 새로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이 결의안에 반드시 찬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권하거나 뭐 제가 보기에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중국의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중국도 2003년에 인권 문제를 헌법에 포함을 시켰고 인권의 개선이라는 취지를 계속 해 나가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내정문제를 들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 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에 6자회담이라던지, 북한문제와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였던 고리가 뭐였나 하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MD문제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 PSI와 인권문제의 중간에서의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현실적 고민이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이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첫 외교적 실험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연철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접근을 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남북한관계에 미칠 파장도 있을 거고 중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성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지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 접근이 아니고 정말 전략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면, 과거에 인권이 개선된 사례를 봐야 합니다. 인권 개선국의 경우를 보면, 체제의 안보가 적절히 유지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등 체제가 변화하면서 인권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등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강제적인 인권정책, 무력을 동반한 체제전환 등은 거의 실패해서 인권의 악화만 가져왔습니다. 이번 취임사에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위대성을 얘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을 북한에 잘 투영해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을 위해 개방을 조절해 왔고, 중장기적인 노력으로 민주적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에 기초해서 북한에게도 중장기적인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접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나 개방 문제를 정치화해서 강한 조건으로 내건다면, 그건 소위 장애물을 너무 높이 설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설치하는 장애물이나 조건이 결국 우리 외교정책의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박건영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자제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면 북한이 인권문제를 비판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한반도 평화와 대북관계에 치명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부도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실용주의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면 정치적으로 인권문제를 이용하고자하는 유혹이 있을 때 거기에 너무 탐닉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못하게 만드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김-노

정부가 하지 못했던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권문제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서 기권한다던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참여하고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고 북한과 인권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키고는 제가 모두에서 말한 괴구식 실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면서 동시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또는 남한의 민주주의가 북한의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즉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가 파탄 날 수도 있고, 남북관계가 험악해지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동시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안보가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인권 또는 대외관계가 개선되는 중요한 사례가 사실 중국 아닙니까? 이회옥 선생님 계시지만 모택동 시대와 78년 덩소평이 집권한 이후에 상당히 중국에 변화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중미관계가 개선됨으로 해서 이 중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개선됐다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외관계 개선에 나선 것을 현실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련 사례를 봅시다. 소련이 그나마 인권대화 등에 참여하고 이렇게 된 것은 거기에는 미국대사관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미국의 대사관이 들어가 있기에 소련의 지식인들이나 시민사회가 외부가 소련을 보는 관점을 이해 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서구적인 인권의 개념 그것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로컬의 인권개념과 충돌하는 바를 이해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인권을 개선하는데 전초기지가 됐었다고 애길 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에는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있었죠, 미국대사관도 있었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는 미국대사관도 없고 시민사회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상태를 놔두고서 인권만 강조하게 되면 과거 중국과 소련과 한국의 역사적인 사례를 외면하는 그런 요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용적, 현대적,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양면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철

선거 기간 동안에 정치적인 발언에 관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작권' 일정 재조정 문제 등이 언급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저는 '전작권' 전환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취임 전과 후의 태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가 한 말 '조건이 변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태도에 변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모호성 속에 숨겼다 이런 식으로 태도가 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재협상 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작권' 전환문제는 미국의 전 세계적 차원에 있어서의 국가 안보적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노 정부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 국방성은 GPR을 계획하면서 한국내의 주한미군이 감군될 수밖에 없다. 왜? 지금은 군대를 필요할 때 마다 애들 장난감 레고처럼 끼워서 작전을 수행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대규모 지상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감군은 불가피한데 만약 명 정도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50~60만 대군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비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웬벨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작전통제권 전환문제에 관해서 재협상해야 될 군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적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미국정부에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정부 간에 합의한 것을 정치지도자가 바뀌었다고 다시 재협상 한다면 국가 신인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전작권' 전환문제에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는 비대칭 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핵은 재래식 무력의 증강이나 효율성 재고로 억지되는 무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대칭 무기는 비대칭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면 핵 억제, 핵 보복에 의해서만 핵이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핵 억제력은 미국이 이미 핵우산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NPT체제에 따라 핵보유국은 이미 한국뿐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NPT 회원국에게 이중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6자회담을 통해서 핵 제거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군사전략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핵은 핵을 가지고 억제하는 것인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협은 제거하되, 핵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재검토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희옥

'전작권' 문제를 협상하고 하는 과정들은 하나의 정상국가로 가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되돌리게 되면 한국이 독립적인 외교 공간들을 과연 확보 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재협상 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이 다른 국가, 특히 중국같은 나라에게 어떻게 얘기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수동적이지만 수용하고 있는 데요. 그건 냉전의 유산으로 수용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국면이 탈냉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왔다고 평가하고 그게 한중관계 강화로 전개 되어왔다는 근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전작권'을 다시 재협상 한다든지 또 동맹을 복원한다는 이런 문제들은 한국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공간을 훨씬 더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사나 외교안보전략 등 외교그림 속에서 지역다자안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역다자안보문제나 지역공동체 같은 이런 문제가 빠진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 외교노선에 대한 반면교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정부가 동북아 이니셔티브 문제를 제기하고 동북아 공동체 문제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우려하면서 의도적으로 뺀 건데 현실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자안보에 대한 논의는 소지역주의가 되건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국한해 접근하건 아니면 6자회담내의 워킹그룹을 활용하는 형태가 되건 어떤 식으로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빠질려고 해도 빠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박순성

현 정부가 내세우는 키워드가 '이념의 시대에서 실용의 시대로' 인데, 한미동맹은 전형적으로 이념의 시대, 냉전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냉전의 산물, 이념 투쟁의 산물인 한미동맹에 대해, 현재의 관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검토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실용의 문제이지요. 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마치 과거로 되돌아가자, 이념의 시대로 되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용주의, 국익우선을 강조한다면, 진정 현 상황에 걸맞은 외교안보전략의 기본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동북아에서 군비증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자칫 군비증강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과 조건에 알맞은 안보전략을 새로이 모색해야 합니다.

김연철

아까 얘기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기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순성

현 정부가 빨리 자기 자신의 인식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현재 남북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동북아 질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 정부도 주장하고 있듯이 현재 남북관계를 화해의 단계라고 이해한다면, 더욱 적극적인 협력 정책을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평화유지 차원의 화해의 단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협력 체제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에 알맞은 정책을 펴 나간다면,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에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는 정권의 성과이자 또한 민족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비핵 · 개방 · 3000> 구상도 실현할 수 있겠지요. 하나만 더 이야기 하면, 현재 북한의 반응은 지금 일종의 관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총선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총선 전후에 있을 비료와 쌀 협상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가 유연하게 나간다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이명박 정부도 변하겠지요. 남북이 접촉을 통한 변화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박건영

보수는 실용주의죠! 이명박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합의 던지 간에 합의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이 부분에서는 내가 마이너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자기가 플러스 되는 거는 다 하겠다 하면 거꾸로 보면 북한은 다 마이너스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의 핵심인 역지사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는 그러니깐 합의를 전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합의 중에 일부만을 채택하는 것은 역지사지가 아니고 그것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전향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지사지가 실용주의고 그 방면에서 대북관계 개선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희옥

저는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권의 등장이기 때문에 보수정권이 북한을 잘 달래고 평화의 길로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안정화 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의 침묵을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한국총선 때까지 갈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베이징 올림픽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월에 올림픽이 있고, 2009년은 북중관계 60주년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지게 되면 북미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발전하게 될 것 입니다. 북중 간에 재정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를 풀었고 실질적인 관계도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으로 코리아 패싱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발 코리아 패싱이 생기면 이것은 한미동맹에 편승하여 코리아 패싱을 넘어서려는 전략이 착오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명박 정부의 논법대로 기회비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실용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문제는 한반도 미래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가 분명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철

제가 봤을 때 북한에 침묵이 오래가고 있는데 매우 이례적인 거라고 봅니다. 아마 두 가지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년 포용정책의 결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이 많이 진척이 됐기 때문에 그 만큼 북한경

제에서 대남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만큼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대남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바램 이었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레토릭을 보면 이 레토릭만 갖고는 굉장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강경한 말들이 있고 그게 막 섞여서 지금 현재 나오는 정책담론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거고 이게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도 드러날 것입니다.

당장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희옥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는 북중관계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이 사실은 2007년 정상회담 할 때까지만 가고 그 이후 선거와 재정들이 들어나면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북관계가 가까워지고 북미관계가 굴러가면서 북한은 중국과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건데, 지금 부시행정부가 끝나가고 있고 남한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의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아마 2007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중국과의 관계 재정상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외교적 구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북중관계가 재정상화되고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대남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